

데스크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선임기자

수요와 공급의 틈새에서 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브로커(Broker)라고 한다. 그들은 흥정과 중재 등을 통해 상거래 역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현재도 상품·어음·외환·보험·선박·세관·증권 등 업종별로 전문 브로커가 있다. 그들의 역할은 경제적 활동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순기능이 크다.

문제는 불법 브로커다. 그들의 영역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의료·법조·문화 등이들이 거대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은밀한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사회적 시스템을 잠먹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브로커-협잡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치 브로커의 폐해는 심각하다. 온갖 불법·탈법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면서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구멍을 낸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

4·15 총선과 정치 브로커

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정치 브로커의 전형적인 행태는 한 표가 절실한 후보들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이다. 선거를 처음 치르는 초보 정치인일수록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과 당원들을 부풀린 명단을 내세우며 유혹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 다음 단계로는 그동안의 선거 경험을 내세우며 마타도어 조성 등 불법·탈법 선거 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종 종착지는 결국 돈이다. 지지자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금품 살포나 식사 대접 등 불법·탈법이 필요하고 결국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거절하면 상대 후보를 돕겠다는 것이며 실제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달콤한 유혹의 빛

하지만 요즘에는 이 정도의 정치 브로커로는 싸움이 잘 먹히지 않는다. 선거법이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정치 브로커의 행태가 그만큼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의 정치 브로커 A씨는 최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캠프만 세 곳이나 전전해, 달라진 세태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제 표를 얻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준은 정치 브로커의 세계에서 3류로 취급된다.

진짜 '선수'들은 스펙터터 다르고 실패도 비교적 분명하다. 선출직을 지냈거나 학생 운동권 출신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이들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영입되는 케이스도 많은데 그들은 선불식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은 확실한 당원 명부와 각종 인연을 통해 형성한 인맥을 구체적으로 내민다. 또한 선거 캠프에 합류한 초기에는 자신의 돈을 쓰면서 조직을 추스르게 하고 유력 선거 전략을 제시하는 등 핵심참모로서 자리를 구축한다.

이런 측면에서만 보면 나름 전문성을 갖춘 정치 컨설턴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실상은 선거 과정에서 온갖 협잡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는 이들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 이처럼 캠프에 깊숙이 들어가 활동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당선자의 핵심 측근 행세를 하며 공무원 등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 이권이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정치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다.

이들은 불법 선거운동을 매개로 후보자의 코를 꿰어 놓기도 한다. '폭로'라는 보이지 않는 협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다. 실제로 정치 브로커에게 약점을 잡혀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난 때까지 마음을 졸이는 정치인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정치권 부패 고착화

일부 정치 브로커들은 지방선거 후보 추천 등에도 개입하는 등 영향력을 키우며 지역 정치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는 지역 정치권의 부패 구조를 점차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광주에서는 학생 운동권 출신 B씨와 구청 및 광역단체 산하기관을 전전하면서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C씨 등이 대표적이다. 또 후원자라는 가면을 쓰고 식비 등 선거 캠프의 경비를 대고 핵심 측근을 자처하며 이권에 개입하는 유형의 브로커들도 수도무적이다.

4·15 총선이 20여 일 남았지만 일부 후보들의 선거 캠프에는 여전히 정치 브로커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들을 철저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지역 정치의 미래는 암담하다. 그들의 입김이 커질수록 후보 정치는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은 자신을 단호하게 뒤돌아보아야 한다. 정치 브로커들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정당당한 대결에 나서는 것이 후보자는 물론 호남 정치의 미래를 열어 가는 길이다.

은편칼럼

온라인 강의는 처음이지?



이병우  
단국대 교양대학 외래교수

연대까지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준비 부족과 과제만 부과하는 경우에 특히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불만의 소리입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안 하시고 수업 자료만 게시판에 올리셨어요. 각자 공부하고 과제까지 내야 해요. 이럴 거면 혼자 책 사서 공부했지, 왜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에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와 강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엔 동영상 강의로 인한 애로 사항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툴을 이용할지, 장비는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할지, 동영상 구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내용부터 동영상 강의 제작 팀을 주는 내용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들은 이런 교강사들을 위해 간단 동영상 제작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5분짜리 동영상은 몇 개 만들어야 하는지, 위기를 통해 배운 것을 현장에 적용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음과 말투, 쓸데없는 '아-', '음-' 하는 중간어 사용, 말하다가 갑자기

방향 틀기 등등... 유명 강사들의 인강을 보고 자란 대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가장 만들기 쉬운 PPT 툴을 이용해서 동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채널로는 학교 이리나 클래스에 공지 사항을 올리고 동영상은 유튜브에, 과제 제출 및 피드백은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처음인지라 솔직하게 개방하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시로 받으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교강사들도 1인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강의 상품 품질을 높여야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19세기 교육 시스템으로, 20세기 학생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실에 대해서 자성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를 통해 배운 것을 현장에 적용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고

광주형 일자리, 나눔·연대 정신으로 결실 맺자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14개의 사외 협력사를 보유한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선업계 최초로 협력사와 상생 업무를 담당할 '동반 성장실'을 신설했다.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운영과 도급단가 인상 등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직접 20억원을 출연하여 사내 협력사들과 함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확대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등 노동과 사, 원정 기업과 협력사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광주는 일찍이 나눔과 연대 정신으로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당기는 선봉에 섰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불의에 맞서 정의를 실천한 도시가 광주다.

광주는 최근 코로나로 대구 시민들이 고통 받을 때도 대구시민들이 광주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광주 정신의 2020년 버전이다.

제조업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광주정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광주가 광주 정신에 기반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이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형, 부산형 일자리'처럼 일자리 사업에 도시 이름이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 지식기반 산업화로 재편되어 가는 산업구조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그만큼 지역의 청년일자리가 간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절함으로 출발시킨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은 세 번의 산고 끝에 지역 노동계의 통 큰 양보와 결단으로 2019년 1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노사민정이 함께 마음을 모아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주)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이다.

협약 당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분산되어 있는 지역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지역노동계의 헌신이 있었기에 투자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광주 시민들은 노동계의 결단이 모두 박수를 보냈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시민들의 사랑으로 태어나, 시민들의 관심을 양분 삼아 성장할 '시민기업'이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취지

에 맞게 노사민정이 합리적인 내용을 준수하여 노사상생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노사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 나갈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역량 있는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 노동계의 대승적인 협력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지역노동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느끼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이다. 촉박한 일정 속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다보니, 광주주시 노동계와 소통 측면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광주시는 노동계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복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누구보다 기대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 노동계도 사업에 참여하여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해 본다.

社說

때맞춰 나온 양 시도의 코로나 생계 지원책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58만여 가구의 소득 하위 계층에게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주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체 61만 8500여 가구 중 중위 소득 100% 이상인 27만 가구와 정부나 시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는 8만8000가구를 뺀 26만여 가구(41.9%)다.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또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이후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는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총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보험설계사와 건설 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리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적했거나 무급 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최대 100만 원을 지원

한다.

전남도의 취약 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100% 이하 약 32만 가구다. 도내 전체 87만 가구 중 기존 정부 생활지원대상자를 제외한 37%가 해당한다. 가구원에 따라 30만~5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8만 5000명에게는 3개월분 공공요금을 최대 30만 원씩 지원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생계와 생업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때맞춰 제시된 시도의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긴급 생계 자금의 경우 지역 내에서 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고 지급기로 해 민사의 지역 경제에도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비상 국면인 만큼 중요한 것은 속도다. 시도와 시도의회는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과 처리를 통해 민생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두환 씨 호화 생활 무슨 돈으로 하나 했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화 생활 자금 출처가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인물은 그동안 전 씨의 호화 골프 및 12·12 기념 오찬 등을 폭로해 '전두환 추격자'로 불리는 임한솔 민생당 정의사회구현특위 위원장이다.

정의당을 탈당한 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임 위원장은 잇따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의 불법 재산 정황 및 추징금 압류 실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씨 부부가 숨겨 둔 차명재산을 사용해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된 인물은 자신 차명재산 현금조달책 역할을 맡은 기간 해 왔음을 제3자를 통해 시인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 '이 모 씨'를 특정했다. 연회동 전 씨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이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모 야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임 위원장은 "단순 사고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했다. 또한 "이 씨 주변 인물을 탐문한 결과 이 씨와 금전 갈등 관계에 있는 제3의 인물 J씨를 확인했다"며 "서울 강남에서 수백억 원대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 J씨가 관리하는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불법 축적된 전 씨의 차명재산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이 씨가 전 씨의 차명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J씨가 관리하는 일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임 위원장의 의혹 제기기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이다"라며 일축했다.

그럼에도 임 위원장은 검찰의 즉각적 수사를 촉구하며 불법 행위자를 엄벌하고 불법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다만 임 위원장은 관련 인물들의 증언·제보가 있다면 이 같은 증거나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관련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상실감을 더욱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개인 주식투자자(개미)들이었다. 코로나사태로 국내 주가가 한 달 사이에 30%가량 폭락했기 때문이다. 1997년 IMF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이전에도 주가 대폭락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단기간에 급락한 경우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시장에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30대 젊은 층은 중심으로 한 개미들의 주식 매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 발생 후 최근 2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15조 원어치를 팔 때 개미들은 17조 원가량 사들였다. 외국인이 던진 매물을 개미들이 받은 것인데 이를 두고 '동학개미운동'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개미들이 외국인의 투매에 맞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1984년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말이다.

동학개미운동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 외국인이 연일 쏟아 내는 삼성전자 주식을 개미들이 받아 내고 있다. 2개월 동안 개미들이 매수한 금액만 9조 원(우

선주 포함)에 이른다. 개미들의 매수 배경을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급락했던 주식이 얼마 가지 않아 반등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다는 학습효과도 작용하고 있다. 한 주에 250만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가가 액면분할로 5만 원대로 낮아져 국민주가 된 것 역시 개미들이 몰리고 있는 원인이다.

동학개미운동은 2030세대가 이끌고 있는 데 대한 우리의 목소리도 들린다. '가성화폐'를 겪은 2030세대들이 이번 코로나 증시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보고 달려들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다. '공포에 사라'는 증시 격언을 생각하면 매수 타이밍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다.

1984년 동학농민군은 우금치전투에서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본군에 참패했다. 개미들이 이번 전투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빛내서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뿐이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생존할 수 있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곡(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